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시행령 포함)

문 27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구조권한을 행사하는 지역통제단장이 설정한 위험구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.
- ㄴ.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중 민간 소유 지역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·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
- ㄷ. 안전도가 '미흡'으로 구분된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월 2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ㄹ. 안전도가 '미흡'으로 구분되었던 특정관리대상지역이 그 지정에서 해제되는 경우, 그 사유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이다.

- ① ㄱ, ㄹ
- ② ㄴ, ㄷ
- ③ ㄱ, ㄴ, ㄷ
- ④ ㄱ, ㄷ, ㄹ

문 28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각종 계획과 관련하여 아래 (가) ~ (라)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?

-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(가)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.
-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수립한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(나)에(게) 보고하여야 한다.
- 정부합동 안전 점검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(다)에(게) 통보하여야 한다.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험구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·군·구 재난 예보·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(라)단위로 수립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| | (가) | (나) | (다) | (라) |
|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|
| ① | 안전정책조정위원회 | 국무총리 | 정부합동안전점검단 | 1년 |
| ② | 중앙안전관리위원회 | 국무총리 | 행정안전부장관 | 1년 |
| ③ | 안전정책조정위원회 |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| 행정안전부장관 | 5년 |
| ④ | 중앙안전관리위원회 |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| 정부합동안전점검단 | 5년 |

문 29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재난관리자원으로서 비축·관리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전기·통신 기자재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·운영하는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에 입력·관리하여야 한다.
- ㄴ. 시·도지사는 재난예방조치 실적이 포함된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1회 관할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.
- ㄷ.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0명으로 구성된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ㄹ.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의 장은 관할 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한 긴급안전점검 결과,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인접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보수 등 정비를 명할 수 있다.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ㄹ
- ③ ㄴ, ㄷ
- ④ ㄴ, ㄷ, ㄹ

- 문 30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하면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군부대의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.
 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급한지 여부의 판단과 무관하게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민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다.
 - ③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, 긴급구조 권한을 행사하는 지역 통제단장은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선박의 점유자에게 그 선박을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고, 그 점유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.
 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문 31. A군의 군수 甲은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, 2022. 3. 1. 해당 재난현장에서 응급조치에 장애가 되고 있는 건축물(乙 소유 및 거주)을 제거하는 조치를 하였다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甲은 긴급한 경우 乙에게 목적·기간·대상 및 내용 등을 적은 응급부담 명령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할 수 있고, 그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부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 - ② 甲은 응급부담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A군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.
 - ③ 甲은 2022. 5. 29.까지 乙과 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.
 - ④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, 乙은 협의가 결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.

문 32. A시의 최근 3년(2019 ~ 2021) 동안의 「지방세법」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이 1,000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,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A시의 장은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매년도 10억 원 이상을 의무예치금액 으로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A시의 장은 2억 1,000만 원 이상을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- ③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A시의 의무예치금액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.
- ④ 2021년까지 A시의 누적 의무예치금액이 100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022년 의무예치금액을 5억 원으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.

문 33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<보기>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A시에 산불이 발생하여 A시의 장은 경보를 발령하고 진화작업 등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및 긴급구조를 하고자 하였다. 이를 위해 A시의 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인 B기관의 장에게 인력의 지원을 요청하였다. 이 요청에 응하여 B기관의 긴급구조 지원요원 甲은 화재복구 및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사망하였다. 甲의 유족으로는 배우자 乙 및 아들 丙(18세), 어머니 丁이 있다.

— <보 기> —

- ㄱ. 지원을 요청받은 B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.
- ㄴ. A시의 장은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B기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, 이 경우 다시 문서로 통보할 필요가 없다.
- ㄷ. 甲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「민방위 기본법 시행령」을 준용한다.
- ㄹ. 丙은 甲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.

- ① ㄱ, ㄷ
- ② ㄴ, ㄹ
- ③ ㄱ, ㄴ, ㄷ
- ④ ㄴ, ㄷ, ㄹ

문 34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<보기>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A시 B 지역에 A시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한 피해가 발생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재난인 X사고가 발생하였다.

— <보 기> —

- ㄱ. X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은 A시의 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ㄴ.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ㄷ. X사고로 발생한 B 지역의 피해가 국고지원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.5배를 초과한다면,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B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.
- ㄹ. X사고로 B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「재해구호법」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①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ㄹ
- ④ ㄱ, ㄷ, ㄹ

문 35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<보기>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A시에서는 2022. 1. 20. 호수가 많은 이 지역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지역축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모를 진행하였다. 그리고 불꽃놀이 기획 전문업체인 B 회사가 개최자로서 호숫가에서 2022. 6. 30. 폭죽을 사용하는 불꽃놀이 축제를 30분간 진행하는 계획이 2022. 3. 15. 선정되어 지역축제 개최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.

— <보 기> —

- ㄱ. B 회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A시는 물론,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.
- ㄴ. 만약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 명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라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.
- ㄷ. B 회사는 안전관리계획을 2022. 6. 16.까지 A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2022. 6. 23.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ㄹ.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은 물론, 축제 장소·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은 B 회사가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.

① ㄱ, ㄴ

② ㄱ, ㄹ

③ ㄴ, ㄷ, ㄹ

④ ㄱ, ㄴ, ㄷ, ㄹ